

# 정부 120대 국정과제 최종 확정 광주 인공지능 산업 강화 등 포함

### 110대 과제에 '지방시대 과제' 추가 국무회의 의결... "속도감 있게 추진"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점검

정부가 최종 확정된 120대 국정 과제에 광주 인공지능(AI) 산업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26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면서 "1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기본 부문(정치·행정·경제·외교안보)에 미래 지향성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은 6대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

방시대 등으로 구성됐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 주요 과제가 포함됐다.

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이 들어갔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는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의 과제가 반영됐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는 능동적 경제 안보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일류 보훈 등이 포함됐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는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성장거점 육성 등이 반영됐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각 부처는 이행 상황을 매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국무총리 주재 현안 조정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이외에도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국정과제 이행 결과는 매년 정부 업무평가에 포함해 평가하기로 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으나,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국정과제에 추가 반영한 끝에 총 120개로 확정됐다.

120개 국정과제 중 광주·전남과 관련해 눈에 띄는 과제는 광주 인공지능 특화 데이터센터 및 차세대 슈퍼컴 도입을 통한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실현이다.

정부는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제로 정하고,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주에 데이터센터, 슈퍼컴 등을 도입한 뒤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 융합을 확산하는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세계 3위권 내 인공지능국가(2021년 기준 6위), 데이터시장 2배 이상 성장,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술력 확보 등의 실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한덕수 총리 올 성장률 2%대 중반 전망

###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당초 한국은행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는 안되겠습니다만, 2% 중반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전망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관련 질문에 "다행히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규제가 조금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민간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정학적인 이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제가 안 좋다"면서 "따라서 우리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고, 유가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내려갈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연간 성장률이) 한 2% 정도 언저리 수준은 유지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 한 총리는 내년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보다는 조금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은 덜 걷히고 경기는 가라앉을지 모르는데 긴축 재정을 할 건가'라는 김 의원 질문에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저희가 생각하는 관리재정수지가 GDP(국내 총생산) 대비 연 5.2% 정도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내년에는 그것(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한 3% 정도에서 억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도 적자는 나는 거지만, 올해보다 약 1/2 정도로 적자 규모를 줄여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최근 급등한 환율 및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묻는 말에는 "중국 경기가 너무 나빠 대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상황이고, 특히 일본이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티어서 엔화가 굉장히 절가 많이 되고 있다"며 "환율 문제는 저희가 함부로 손을 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조오섭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부담 완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은 26일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 및 부담금(건강증진 부담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영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해 연간 매출액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대수수료율에 대한 적용기준을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의 가

맹점이 생길 수 있다.

조오섭 의원은 "신용카드가 일상화된 시대에 우대수수료를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견뎌왔던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고충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윤재갑 농어업 부문 조세특례 연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26일 농어업 부문 조세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축사 용지와 어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조항들에 따른 조세 감면액은 총 2조 3000억원에 달해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농가가 2조 이상의 조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에 윤 의원은 농림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조세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의 길을 열었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시장개방, 기후, 환경변화 등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촌 소득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기한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김영록 지사 한동훈 장관 만나

### 전남형 인력대책 마련 적극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법무부의 '지역특화비자' 시범 사업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만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남형 인력대책을 마련해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안공항의 무비자 입국제도 운영도 건의할 방침이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는 8월 7일 예정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가 추진중인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이 전남지역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남형 인력대책을 마련해 건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자체의 인력 수요에 맞춰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등에게 비자를 내주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키로 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전남의 경우 16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선정될 정도로 타 시·도에 비해 인력난이 심각한 현실이다. 특히 전남지역 주요 조선사들은 지난해 모두 64척을 수주, 지난 2013년 이후 최대 실적을 내는 등 호황에도 불구하고, 적정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1200여명의 조선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대정부질문 단상 향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 투자자 모심

1. 자금 - 10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금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주식회사 오 천  
H. 010-3605-5000

## 신안동, 대인동, 땅, 매매

- 1.新安동 176평, 대인동 15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300만원 정도 수입중
4. 매매 - 평당 1200만원씩, 조정가

문의. 010-3605-5000